

# 한국유기비료신문

Korean Organic Fertilizer Newspaper

제123호 2020년 5월 28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발행

www.kofic92.or.kr / Tel 043) 231-3920 / 창간 2008년 10월 10일 월간

## 유기질비료조합, 제2차 이사회 개최

기관별 역할 분리하여 업계부담 최소화  
원료배합비율, 일정비율 이내의 오차범위 허용



김종수 이사장은 비료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시 조합에서 건의 할 개정사항을 발굴하여 5월 28일 조합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차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비료 품질검사는 기관별 역할을 분리하여 업계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며, 원료배합비율의 경우는 일정비율 이내의 오차를 허용하고, 5% 미만 사용원료인 경우에는 원료명을 다량 투입순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하 '유기질비료조합')은 5월 28일 개최된 제2차 이사회에서 올 해 3월 개정된 「비료관리법」 비료 품질검사 권한 위임을 농촌진흥청장(이하 '농진청')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

도록 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시 조합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개정사항을 발굴하여 조합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김종수 유기질비료조합 이사장은 "먼저 농진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양 기관에 단속권한을 모두 부여할 경우 단속기관이 많아 업계경영에 큰 부담 요인이 되므로 농진청은 비료 공정규격설정 등 관련 기준만 마련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품질관리 담당 등 기관별 역할을 분리토록 함으로써 업계 부담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제시하고, "가축분뇨 등 유기질비료 원료의 특성상 현재 정수로 되어 있는 원료배합비율은 생산업체에서 준수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보증표시 개선도 주장하였다.

덧붙여 "부산물비료(퇴비·유기질) 원료의 수분 및 성분함량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원료의 배합비율을 증감시켜 수분·보증 성분을 맞춰야 하나, 규정상 배합비율 오차를 허용하지 않아서 범법자 양산 우려가 있다"고 말하였다.

업체에서는 부산물의 특성

## 대기분야 자가측정 실효성 높인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5월 27일 시행

자가측정 결과 미제출 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부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업자는 배출구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시도지사,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행정기관에서 사업장 자가측정 결과에 대한 관리 강화차원에서 도입됐으며,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에 100만 원, 2차에 200만 원, 3차 이상부

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사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산시스템(대기배출원시스템, SEMS)을 통해 측정결과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출 의무가 없다.

사업자가 자가측정결과를 운영기록부에 기록·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도 1차에 100만원, 2차에 200만원, 3차 이상에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자가측정대행시, 사

업자가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 결과를 조작하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적발시 1차에 조업정지 90일, 2차에 허가 취소 또는 폐쇄처분 실시 등

[2면에 이어짐]

상 무기질비료처럼 함량이 균일한 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원료배합비율의 경우 일정비율 이내의 오차를 허용하고, 5%미만 사용 원료의 경우에는 원료명을 다량 투입순으로 표기하자는 것이다.

현재 비료 보증표시와 제품의 원료배합비율이 다를 경우 허위표시 규정을 적용하여 생산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비료품질검사 권한의 위임은 2021년 8월 시행될 예정이다.

[김은혜 기자]

## 무료 판정단 모집 (선착순 10분)

효과는 좋은데 가격이 부담되신다고요?

에어리페어와 FS 골드는 고농축 원액으로, 1,000배로 효과가 있으며 액비 살포 시에는 무려 20,000배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100~200배 희석으로 비용이 과다한 면이 있어, 가장 저렴하게 사용하기 위한 비료 공장에서의 적정 희석 배율을 정하고자 하니,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사용해 본 제품 중에 가장 효과가 좋다는 평가는 계속될 것입니다.

판정 항목

① 최대 희석 비율 ② 면적당 최소 사용량

약취 즉시 제거  
친환경 에어리페어 + FS 골드  
Perfect combination



원료 혼합 & 고압분무용  
한돈협회 검증사업 1등 약취제업체

뉴트로

전화번호만 남겨도 혜택이 팡팡!!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31-609-2142

우린네이처

벗과 같이 이웃과 같이~

약취 민원으로부터 해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 풍림아이원 B-1017  
www.woorin.info www.약취제거제.com



## 유기질비료조합, 전남협의회 개최

논토양 살포 등 가축분뇨비 소비처 방안 확보  
월 수백만원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비용 큰부담



가축분뇨비 소비처 방안으로 논토양에 가축분뇨비를 살포해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되었다.

밭작물 위주의 가축분뇨비 지원 사업을 쌀 생산단지 농가에도 공급함으로써 벗꽃환경으로 부족한 논토양의 유기물함량을 높여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비 소비처를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유기질비료조합 전남 지역협의회 강승원(조은농원 대표) 회장은 5월 7일 11시 전남 나주시 문화로 베네치아에서 전남지역 52개 회원사 중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전남사무국 직원채용과 새로운 임원진(고문)을 구성하였다. 또한 전남도청 친환

경농업과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농자재' 지역제품 구매 캠페인 적극 동참 등 가축분뇨비 소비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끝거웠다. 참석한 조합원들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축 전염병 발생문제와 환경부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역단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에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한편 올해부터 적용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규제강화는 영세한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에서는 여전히 쉽게 받아들이기엔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견이다.

정부에서 시설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월 수백만원의 가동비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김은혜 기자]

## 농식품부, 농번기 농촌 일손돕기 본격 시동

모든 농작업은 「코로나19 행동 수칙」 등 방역지침 준수

5월 약 250여명, 6월말까지 약 3,000여명의 임직원 자발적 동참 계획

최근 농촌 인력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식품 관련 기관이 동참하는 강력한 일손돕기가 추진된다.

이번 일손돕기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외국 노동인력의 입국이 자연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원봉사자가 감소하는 반면, 양파 등 노지채소 수확과 정식, 과수 적과 및 봉지씌우기 등의 본격적인 농작업이 시작되면서 농업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소속·산하기관은 5월 4일 기준 모두 11개 기관이라고 밝혔다. 6월말까지 농식품부 소속 산하기관 본원(본사) 및 지원(지사) 단위에

서도 약 3,000여명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농촌 일손돕기에 동참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일손돕기는 「코로나19 국민행동 수칙」에 따라 실시하고 농작업시 지역주민과의 접촉은 차단(농장주 제외)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를 보아가며,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일손돕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농촌 일손돕기를 요청하였다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발적인 농촌 일손돕기 운동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PR]

## 5.1일부터 공익직불제 읍·면·동에서 접수 시작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

터 사전확인과 점검이 강화된다.

직불금 신청 시, 신청자의 보조사업 이력(쌀직불금, 유기질비료 등)을 비교하여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여부를 시스템상에서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실경작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청접수(5.1~6.30), 이행점검(7~10월)을 거쳐 연말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PR]

공익직불제: 기본형공익직불제(소농직불제, 면적직불제) + 선택형공익직불제

## 개정된 농수산자조금법' 20.5.19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 ①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을 기존 의무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농수산업자에서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
- ②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해 관련 정부 정책사업 지원 제한
- ③ 자조금단체가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 명단을 작성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제공

「농수산자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2020년 5월 19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를 확대하고, 자조금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개정된 「농수산자조금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을 기존 의무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농수산업자에서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함으로써, 의무거출금 납부 및 의무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여 그동안 법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였다.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품목

의 농수산업자가 해당 품목과 관련된 정책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무거출금 납부 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미납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를 확대하여 자조금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조

금단체가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를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수산업자에게 품목 관련 교육,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각종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임의자조금 품목 중 양파·마늘부터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자율적인 수급조절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양파·마늘 가격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양파·마늘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자율적인 수급조절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농수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의무자조금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 수급조절, 소비촉진,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R]

[1면 '대기분야 자가측정 실효성 높인다'에 이어짐]

사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27일까지 시행령과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장의 자가측정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적정 관리를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기자]

## 농업환경보전과 토양양분 균형관리 시작은 ‘비료사용처방서’

### 농촌진흥청, ‘공익직불제’ 시행 앞두고 비료사용처방서 신청 권고

공익직불제의 의무사항인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비료사용처방서의 비료 추천량에 따라 비료를 사용해야 한다.

비료사용처방서는 pH, 유기물 함량, 인산 등 토양양분 상태를 검정한 후 △한 작기 동안 공급해야 하는 질소, 인산, 칼리질 비료량 △pH 교정을 위한 석회질 비료량 △유기물 공급을 위한 퇴비량 등 한 해 영농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익직불제 신청 대상이 되는 농경자는 146작물에 대해 비료사용처방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비료사용기준이 없는 소면적 작물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기준 처방기준을 활용한 유사작물

처방(48종)과 지자체 영농정보 처방(32종)으로 비료사용량 정보를 제공한다.

비료사용처방서는 작물 재배 전 퇴비와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양을 균일하게 채취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흙토람(<http://soil.rda.go.kr>)의 비료사용처방-토양검정정보 메뉴에서 최근 5년 내의 토양 화학성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고병구 과장은 “환경과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꼭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해야 한다”라며, “농업인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PR]

## 5~6월 중 우박 예상, 미리 대비해 피해 줄여야

### 우박 피해 잣은 지역 과수농가 비가림 설치…밭작물은 부직포 씌우기

봄철과 초여름 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강한 비와 함께 우박이 내릴 가능성이 높아 과수와 밭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관리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연중 발생하는 우박의 50~60%는 5~6월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비 예보가 있을 경우 우박 발생이 잣은 지역은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를 해야 한다.

우박이 떨어지면 농작물에 물리적인 피해(열매 상처, 가지 부러짐, 잎사귀 찢김)가 발생하므로 우박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예방적 조치로 망 덮기 또는 비가림재

배, 터널재배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과수농가는 구멍의 크기가 1.25mm인 한랭사(가립망)나 간격이 좁촘한 그물망을 쳐주고, 고추·배추 등 노지에 있는 밭작물을 재배할 경우 비닐이나 일반 부직포보다 얇은 일라이트 부직포를 활용하여 터널재배를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우박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상황에 따라 열매솎기와 비료주기를 조정하여 생육을 회복시켜야 한다.

과수는 피해가 심한 열매를 따내어 나무의 세력(자람새)을 유지하고,

[5면에 이어짐]

## 친환경유기질비료(퇴비) ...

**흙을 살리고,  
물을 살리고  
환경을 살립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 국립환경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 개선 연구 맞손

### 미세먼지 및 축산환경 분야 융·복합 연구기능 강화 위해 협력



양창범 국립축산과학원장(오른쪽)과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왼쪽)이 ‘대기환경 및 축산환경 분야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립축산과학원과 미세먼지 및 축산환경 분야 융·복합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5월 15일 오후 전북 완주군 국립축산과학원 대강당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대기환경과 축산 분야를 대표하는 국립연구기관이 축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암모니아 등)의 영향을 분석하는 등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유익한 연구 활동과 정보교류 등 다양한 협력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분야 △축산 악취물질 분야 △가축분뇨 배출 원단위 산정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 분야 등 축산환경 분야 연구기능 강화에도 협력한다.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암모니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2차 생성 초미세먼지 저감, 악취 및 양분관리 등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과 악취방지 종합시책 등의 이행을 위한 과학적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창범 국립축산과학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과의 업무 협의와 기술 교류는 초미세먼지, 가축분뇨 등 축산분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축산환경 분야 연구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연구,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국민건강보호 연구, 환경정책 관련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대기오염물질 측정망을 구축하여 신뢰도 높은 대기질 정보를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연구기관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하는 국립연구기관으로 동물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 가축 개량,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안전한 축산물 생산 기술, 조사료 품종 육성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PR]

## 경북도, 가축분뇨를 활용한 친환경에너지 시대 열어

경북형 가축분뇨 에너지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가축분뇨 환경오염 문제와 친환경에너지 발굴, 한번에 해결

경상북도는 5월 11일 김천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 센터에서 「경북형 가축분뇨(LM) 에너지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가축분뇨 에너지산업 육성'이라는 주제로 도·시군 및 축산환경 관리원, 한국환경공단 등 자문기관 관계자와 외부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해 세부 용역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했다.

경북도는 이번 용역과제를 토대로 축분 고체연료의 생산, 유통, 소비의 선순환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축분뇨 에너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첫째 축산(경

종)농가와 축분공동자원화 센터에 축분고속건조발효기, 축분소각보일러, 펠렛성형기 등 연료생산·가공 장비 보급, 둘째 안정적인 소비기반 조성을 위한 규모별 축분에너지전환설비 확충, 축분 고체연료 전소발전 REC 가중치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 발전소 유치계획 마련,셋째 조례제정 및 빅데이터 관제센터 운영으로 고체연료의 안정적 유통기반 조성을 중점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현재 축산업 총생산액은 19조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나 개선되지 않는 생산성, 사육환경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특히 하천, 지하수 등 수질오염 문

제, 약취로 인한 정주여건 악화, 토양 부영양화 등 풀어야 할 난제도 여전하다. 또한 퇴비 부숙제도 시행과 양분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가축분뇨의 에너지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추세다. 경북도의 「가축분뇨 에너지사업」은 축산업의 환경문제와 친환경에너지 발굴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으로 기대를 모이고 있다.

경상북도 김종수 농축산 유통국장은 "가축분뇨 처리에 있어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가축분뇨의 연료 가치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R]

## 하동군, 축산시설 약취 민원 5개 업소 적발



위한 개선 경고 조치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누출할 우려가 있는 양보면 소재 방목장에

하동군은 가축분뇨를 누출할 우려가 있거나 약취로 인해 민원을 유발하는 축산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5개 업소를 적발했다.

올 들어 4월 말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약취와 분뇨 누출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수시지도·점검을 벌여 부적정 운영 등 위반행위를 한 5개 업소를 적발해 조치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을 보면 약취배출기준 초과 1건, 가축분뇨 누출 우려 3건,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1건 등이다.

이중 약취배출기준을 초과한 농장에 대해 약취방지를

대해 조치명령과 더불어 고발 조치했다.

군은 지난해에 비해 축사 약취 민원이 다소 줄었으나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에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과거 중복 위반 축산시설 등을 중심으로 약취를 포집하는 등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박보승 환경보호과장은 "축산시설에서 나오는 분뇨나 약취는 민원은 물론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약취 및 분뇨, 퇴비 누출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R]

## 화순군,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 강화...‘청정 화순’ 유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 ... 거점 소독시설 등 운영

구제역 상반기 일제 접종 ... 항체 양성을 제고

AI·브루셀라병·결핵병 방역 ... 농가 일제 점검, 가축 일제 검사



봄철에 발생 견수가 늘어난다고 알려져 농장과 바이러스의 접촉 차단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말까

지 지역의 모든 양돈 농가의 울타리, 퇴비사 등 방역 시설을 점검했다. 야생 멧돼지 접근을 막기 위해 농

가에 동물 기피제 960포, 생석회 6040포, 소독약품 3200kg을 공급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 전염병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전체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FMD) 일제 접종을 시행해 항체 양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구제역 항체 양성을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PR]

화순군이 가축전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선제 방역으로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화순'을 유지하고 있다.

가축 질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지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 관리, 양돈 농가 전담 담당 관제 운영, 외국인 고용 양돈 농가 집중 지도 등 사전 예방에 나섰다.

ASF는 파리, 모기 등 매개 활동이 활발한 봄, 여

지 농가는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씨코바이러스 백신,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백신 등 가축 방역 사업에서 제외된다.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 결과, 양성을

이 소 80%, 번식 돈·염소 60%, 비육돈 30% 미만인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7월 1

일부터 구제역 백신 보조금을 50% 삭감하고 항체 양성을 개선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겨울철에 가금

류에서 발생하는 조류인플

루엔자(AI) 방역을 위해 농

식품부와 군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5월부터 9월까지 가

금 농가 일제 점검을 시행

할 계획이다.

지난 4월부터는 한우·육

우 농가에 막대한 손해를

일으키는 브루셀라병과 결핵

병 일제 검사를 7월 31일까

지 추진할 계획이며 공수의

를 채힐 요원으로 지정했다.

[PR]

## 양구군, 미생물로 축산분뇨 약취 잡는다

9월 30일까지 축산분뇨 약취저감 방역단 운영

광합성균과 질소순환균 혼합 후 희석해 주 5일 살포



살포되는 미생물은 광합성균과 질소순환균으로, 매일 200ℓ 가 하루 3시간씩 주 5회에 걸쳐 살포 기간 내내 살포 된다.

양구군은 약취에 대한 고질적인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축산분뇨 약취저감 방역단(이하 '방역단')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약취가 발생하는 주요지역의 축산 관련시설에 전문 소독업체가 농업기술센터가 생산한 미생물을 약취저감제로 살포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3000만 원의 군비를 투입하는 양구군은 양돈농가 1개소와 한우농

가 46개소 등 총 47개소의 축산시설에 대해 오늘(11일)부터 9월 30일까지 미생물 약취저감제를 살포한다. [PR]

방역단은 합성균과 질소순환균을 1대1로 혼합해 25배액으로 희석한 후 일몰 3시간 전부터 퇴비사 및 축사 바닥에 골고루 분무 한다.

약취저감 미생물은 퇴비 부숙 촉진과 병원균을 억제하고, 축사의 약취(암모니아, 질소균)를 제거하며, 파리나, 모기 등 해충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조인목 양구군수는 오늘(11일) 오후 1시30분 양구읍 하리의 비육우 사육 농가에서 방역단이 실시하는 미생물 약취저감제 살포 작업을 점검한다. [PR]

## 포스트코로나 시대, 중소기업이 나아갈 길을 찾다

중기중앙회, 코로나19사태,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공동으로 14일(목) 10시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코로나19 사태,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정화 중기정책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정책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토론회는 이상명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김용진 서강대 교수 △빈기범 명지대 교수 △중앙대 이정희 교수 각각의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 정책 과제」 발표를 통해,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단기 매출 감소와 자금난이 심해질 것

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산 프로세스 효율화, 맞춤화 생산 기반 마련 등 디지털로 전환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집단적 솔루션의 개발, 디지털기술을 통한 서비스모델의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금융지원 정책제안」을 발표하며, “코로나19로 소비·생산·소득 측면에서 악순환이 반복되며 경제가 급속히 위축된 상태인 만큼 대공황 이상의 경제 불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인건비, 임대료 등 생산 요소에 대한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코로나 위기극복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안」 발표를 통해, “내수경기 침체에 크게 영향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대책이 실행되고 있지만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역부족이다”면서, “향후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여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 지원, 지역상품권 활성화, 생계형 소상공인 복지 지원 등 다각도로 지원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 및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PR]

##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 공제 기금과 함께 해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촉진 이벤트 실시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기금’)의 가입 확산 및 제도 홍보를 위해 5~7월까지 3개월간 「공제기금 가입촉진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공제기금에 가입한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총 1000만원의 국민관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며, 인터넷으로 가입한 전원에게는 5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또한 신규가입자가 기존에 공제기금 이용 고객으로부터 소개받은 경우 기존 고객도 10만원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금번 이벤트를 통해 공제기금이 널리 홍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공제기금

이 시중 금융기관의 보완재로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자가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1984년 출범하여 가입자의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제도로, 가입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모든 중소기업자(유통업종 제외)이며, 매월 부금을 납부하고 4회차 이상

납부시 납입부금의 일정배수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납입 부금에 대해서도 해지하지 않고 만기 후 유지 시 만기이자(현행 1.75%)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출과 저축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PR]

[ 3면 ‘5~6월 중 우박 예상, 미리 대비해 피해 줄여야…’에 이어 ]

새순이 부러진 가지는 피해 부위 바로 아래부분을 잘라 다시 새순이 돋아날 수 있도록 관리 한다.

채소류는 제4종 복합비료를 잎에 뿌려주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병해충 방제를 실시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

충섭 과장은 “재배면적이 넓은 지역에서 우박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행하기 어렵지만, 해마다 우박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에서는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실시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PR]

## 이화학분석의 모든 것을 해결해드립니다!

4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정확한 분석과 저렴한 비용을 제공하는 에이티분석센타로 지금 연락하세요.

“농촌진흥청 비료시험연구기관 – 제 48호  
이화학적 분석(비료, 토양, 양액 등) / 미생물분석 / 식물재배시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 제 35호  
이화학적 분석 / 식물재배시험(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농협중앙회 계통비료업체 발췌대행 검사기관”

**AT**분석센타(주)  
Analysis Technology

인천광역시 연수구 벤처로 100번길 21, 201호.

TEL. 032-715-4755 / FAX. 032-710-4750



## 분만 공간 넓혔더니 어미돼지 긍정 행동 늘어

### 동물복지형 대체분만틀…축사 탐색, 새끼 돌보기 등 활동 증가

농불복지형 사육시설(대체 분만틀)이 어미돼지의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반 양돈농장에서는 분만을 앞둔 어미돼지를 분만실에서 사육한다. 분만실에는 새끼돼지를 보호하기 위해 어미돼지의 운동임을 제한하는 분만틀이 설치되어 있다.

농불복지 양돈농장 인증 기준을 보면 어미돼지가 분만 5일 이후에는 최소한 한 방향으로 놀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농불복지형 대체분만틀은 축제 분만틀은 접었다 편 수 있는 가변형으로, 어미돼지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일반분만틀과 대체분만틀에서 사

육한 어미돼지의 행동특성을 비교, 살펴봤다.

농불복지형 대체분만틀은 대체분만틀에서 사육한 어미돼지가 긍정적 행동을 보이며 활발히 움직였다.

포유동물이나 번식 성직도 기존 일반분만틀 사육과 대비했다.

어미돼지가 대체분만틀에서 누워있는 시간은 1분(시간당) 정도, 훨씬 고, 새끼돌봄시간은 2.53분(시간당) 높았다. 새끼를 훔거나 죽이거나 짙은 시간은 각각 6배, 3배 정도 높았다.

또한, 젖을 먹이는 새끼 수(포유우수)와 젖을 뱉는 새끼 수(이유우수), 새끼돼지의 1일 평균 증가량 등 생산성 관련 어미돼지의 성직은 대체분만틀과 일반분만틀이

더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농축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규호 양돈과장은 “농불복지형 대체분만틀은 시설개선 등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농불복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며 “적구현신의 하나로 농장농불의 독자를 위해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농불보호법 개정 이후 농장농불의 농불복지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양돈농장이 농불복지 인증농장으로 등록되어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축산법 시행령·규칙’에는 임신한 어미돼지의 소통사육을 제한하는 등 최소한의 농장농불 독자를 위한 규정이 신설되기도 했다. [PR]



(동물복지형 대체분만틀)



대체분만틀과 일반분만틀의 형태



(일반 분만틀)

## 제주도, 가축분뇨 관리실태 관계기관 합동 점검

### 환경부 주관,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사전 차단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계기관과 협동으로, ‘2020년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부 주관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 을 점검하고 있다.

합동점검에는 영산강유역 환경성, 도 환경부서, 행정부 환경·축산구서, 자치경찰 및 악취관리센터 등이 참여하여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련업체(자활용연, 수질·운반연, 액비유동센터, 처리연, 공농자

원화시설) 등이며, 심습 민원 유발지역이나 대규모 시설을 우선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도내 양돈분뇨 처리시설은 정화처리시설 2개소, 자원화(퇴·액비)시설 8개소, 에너지화(바이오가스) 시설 2개소 등 총 37개소가 있다.

종점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퇴비·액비물 액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정화시설의 망류수수질기준 초과여부, 퇴·액비 반복·과다 산포 여부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점검에서 관련법령 위반 시설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도 합동 점검

에서는 위반시설 16개소를 적발하여 8,200천원의 과태료를 치부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은 뇌비사와 지역에 뇌비물 카본하는 등 관리기준을 위반, 액비 청분검사 미이행,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대장 작성 미이행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과 질소, 인 등 영양연류 성분이 많아 공공수역에 유출되면 수질오염에 영향이 크고 관리기준 위반 시 악취발생요인이 된다”며 “수제작 내용으로 가축분뇨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PR]

## 이른 더위 가축 스트레스 매일 확인해야

###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 활용…축종별 더위 피해 예방

기상청은 올해 5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온현상이 자주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근 10년 사이 5월 평균 기온이 무려 0.9℃를 넘어서고 있어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은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 ‘축사로(chuksaro.nias.go.kr)’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사용신청 후 이용할 수 있으며, 해우, 젖소, 돼지, 가금의 가축더위지수와 이에 따른 가축관리 방법을 제공한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료나 물통이 미생물 등에 의해 헛져 오염되고 이를 통해 한 번씩 점검한다.

국립축산과학원 영양생리팀 김상호 과장은 “축종별 더위 스트레스에 따른 가축 생산성 평가 고델을 개발하고, 현재 3일 단위로 폭언 가능한 가축 더위지수를 0일로 폭언하는 등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쓰겠다”고 밝혔다. [PR]

가축의 더위 스트레스는 농가의 관리 방법 개선을 통해서도 줄일 수 있다.

가축에게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에너지 함량이 높은 사료를 먹인다. 또한 광물질과 시원한 물을 급여하면 제수분과 미량원소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비타민과 유기산제 등을 사료에 직접 섞어 먹이는 것도 가축의 더위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료나 물통이 미생물 등에 의해 헛져 오염되고 이를 통해 한 번씩 점검한다.

국립축산과학원 영양생리팀 김상호 과장은 “축종별 더위 스트레스에 따른 가축 생산성 평가 고델을 개발하고, 현재 3일 단위로 폭언 가능한 가축 더위지수를 0일로 폭언하는 등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쓰겠다”고 밝혔다. [PR]

## 안동시, 장마철 앞두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단속 나서

### 하천 주변 가축분 무단야적·방치 등 집중 단속

안동시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환경오염 방지 위해 지역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마철을 대비해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구직정 운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해 악취 및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종점점검 사항은 △하천 주변 가축분뇨(퇴비)의 무단 악취 및 방치행위,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관리기준 미준수, △가축분뇨 정화시설의 망류수수질기준 미준수, △부허가·미신고 시설 운영 또는 변경 신고 미이행 행위 등이다. 우려사항 발견 시 고발, 과태료 구부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입구 농가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PR]

전 흥국해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 다수 민원 발생지역이나 대규모 농장 등에 대해서는 불시점검을 실시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안동시는 지난 3년간 환경오염 방지 위해 단속 행정을 강화한 결과 축산 폐수 무단방류 연소 9개소를 고발 조치했고, 망류수수질기준 초과 등 관리기준 위반 및 신고 미이행 등 의 연소 68개소에 대해서는 1억2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입구 농가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PR]

## 한국유기비료신문

Korea Organic Fertilizer Newspaper  
www.kofic92.or.kr

발행인·편집인 김종수 / 인쇄인 배성한  
등록번호 유성 라 00007 (2008. 8. 11) 월간  
창간 2008. 10. 10 / 대표전화 042-826-3921  
3409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79번길 64  
(태평빌딩 3층)

#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 시장 퇴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5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 처벌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 〈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적법한 수탁자(처리업체)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수탁자로부터 수탁처리능력 확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공개하는 정보를 활용해 적법한 수탁자인지 확인,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위탁비용 등을 포함해 서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 △위탁 계약서를 3년 간 보관해야 하며, △1개월마다 위탁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올바로시스템 등을 활용해 확인할 것, △이상징후 발견 시 스스로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할 것, △폐기물 불법처리 인지 시 즉시 폐기물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폐기물 배출자에게는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이 부과되고, 더 나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수탁자(처리업체)가 스스로 작성한 형식적인 서류 확인만 거친 후,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해 왔다.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배출자와 수탁자(처리업체) 간 상호감사를 통해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불법 폐기물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고의·중과실로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임을 인지하고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 이동의 연결고리라는 지적이 있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이 쌓여있는 장소로는 폐기물을 더 이상 운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불법 폐기물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한 번씩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업체는 최초로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별도의 재확인 절차 없이 영구히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경우 종전 명의자가 미이행한 법적 책임의 이행계획서, 새로운 명의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권리·의무 승계를 하더라도 종전 명의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권리·의무 승계 시 종전 명의자의 법적 책임 역시 모두 승계됨에 따라, 고의부도나 명의 변경 등 대행자를 내세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권리·의무 승계를 적용하여 종전 명의자가 불법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불대, 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던 것을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특례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차 감염 우려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허용보관량의 2배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업체로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업체의 실제 계량값과 장부기록사항(반입량, 배출량, 처리량 등)을 올

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며,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하여 규정했다.

## 〈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자 범위를 불법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되고,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한다.

현행 법률은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직접 발생 원인자, 토지소유자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현실적으로 곤란했다.

불법 폐기물의 발생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로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확대함에 따라 책임자를 통한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 폐기물로 인해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행정청으로 하여금 즉시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집행 완료 전에 책임자에게 비용환수를 위한 재산조회,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우선 책임자에게 불법 폐기물 처리를 명령한 후 이를 미이행 할 경우에만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고, 그 이후에야 비용환수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대집행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대집행에 착수하고 조기에 비용환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청이 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책임자에 대한 처벌 강화 〉

환경부, 지자체 등 행정기관은 불법 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그간 불법 폐기물로 인해 취득할 수 있는 기대이익은 높은 반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범죄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불법 폐기물 발생의 원인이 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했다.

## 〈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 〉

벌칙 수준	불법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받은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반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올바로 시스템 입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

이를 통해 불법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중대범죄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불법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한국환경공단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적정처리를 지원한다.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폐기물처리업체 정보 수집 및 해당 정보의 배출자 제공, △배출자의 폐기물 처리 현장 확인 대행, △행정대집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제도 시행 초기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 차원에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기자]

